'2010 아트 광주' 작품 42억원 어치 팔았다는데…

"판매액 부풀려졌다" vs "공개못할 큰손 많다"

53개 화랑중 16곳 작품 판매 못해

"15억원 짜리 작품 팔렸다" 뒷말도

"많은 화랑이 작품을 팔지 못했는데, 어떻게 총 판매액이 42억원일 수 있습니까?" "수십억원 짜리 작품을 팔고도, 공개할 수 없는 게 아트페어입니다"

광주의 첫 국제 미술장터인 '2010 아트 광주'(지난 1~5일·이하 아트광주)의 '판매액'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5일 아트광주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총 판매금액은 모두 42억원. 하지만 광주·대구 지역 일부 화랑 등이 판매금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국내 아트페어는 컬렉터 보호 등을 위해 정확한 화랑별 판매액을 발표하지 않는다.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KIAF의 지난해 매출액은 136억원이었지만 이 또한 추정치다.

12일 아트광주 참여 화랑에 대한 광주일보 취재 결과 예송갤러리·김현주갤러리·DNA갤러리·세줄갤러리·더컬럼스갤러리·갤러리 선 컨템포러리·갤러리2·한국아트체인·안터아트체널·금산갤러리·김현주갤러리·서울옥션·박여숙화랑·예화랑(이상 한국)·토미오 코야마 갤러리(일본)·탕 갤러리(중국) 등 16곳이 작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53개 화랑 중 30%에 달한다.

또 갤러리108(판매액 5000만원)·청화랑(5000만원)·서종갤러리(5000만원)·크라운해태(400만원)·이영아트센터(400만원) 등 판매에 성공한 화랑들의 매출액도 많지 않다.

하지만 조직위의 셈법은 다르다. 판매액에 구입 사실을 밝히지 않은 '큰손'의 거래액을 포함시키고, 가격을 조율 중이어서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을 넣는 것이 통상적인 아트페어의 계산 방법이라는 것이다.

아트광주 조직위가 최고 판매가 작품으로 공식 발표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무제'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아트페어 최고가는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7억5000만원이지만 실제 15억원에 달하는 작품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7억원 상당의 디자인 작품은 해당 화랑에서 판매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국내 대표 컬렉터도 1억4000만원 어치를 샀지만 해당 화랑은 조직위에 3000만원만 보고했다. 지역의 한 컬렉터도 1억원 가량을 구입했지만 화랑가에서는 쉬쉬 하고 있다.

미술품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작품을 사고파는 데에 대한 곱지 않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벌어지는 '아트페어의 풍속도'다.

화랑과 컬렉터 간의 가격 흥정도 정확한 판매액을 추산할 수 없는 이유다. 김재선갤러리는 판매액을 500~1000만원으로 보고했는데, 마감 당시 흥정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판매가격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알려지지 않은 판매액과 화랑가에서 밝힌 판매액을 더하면 35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모든 가격 흥정을 최고가로 산정하고 화랑 간 거래 등을 포함시키면 42억원이 나온다는 게 조직위측의 설명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국내외 모든 아트페어의 판매가는 추정치고 심지어 조사된 금액의 두 배 가량을 늘려 발표하기도 하며, 참여화랑 중 30% 가량은 작품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잠룡들 기지개 대권전쟁 막 오르나

여야 잠룡들이 최근 들어 정치적 기지개를 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여권 내에서는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등 3인의 정치적 행보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그동안 조용한 행보로 일관해 왔던 박 전 대표는 최근 소속 기획재정위에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화두'를 던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이후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설 채비를 보이고 있다.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8·8 개각에서 특임장관으로 발탁된 이 장관은 지난 10일 수도권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당내 친이-친박 진영의 물꼬를 트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구현'의 전도사를 자임하며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최근 청와대와 잇따라 각을 세우는가 하면 '트위터'를 통해 매일 서민 취향의 글을 올리며 친서민 이미지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6·2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시련 속에서도 차기 대권을 향한 '암중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홍준표, 나경원 최고위원 등도 잠룡의 대열로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권도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정세균 전 대표와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 간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차기 당대표가 향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대 결과에 따라 '빅3'의 운명이 엇갈리면서 당내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휴일인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직원들이 이산가족 현황판을 보며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77%가 70세이상…일회성으로 한계

北 수용대가 플러스 알파 요구할 수도

정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의 배경과 전망

북측의 지난 10일 이산가족상봉 제의에 대해 정부가 1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제의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의 방침은 일단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처럼 이뤄지는 남북 적십자 간 접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표시로 보인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스스로 인도주의를 언급한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 이산가족과 관련한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겠다는 셈이다.

정부는 2008년 출범 초기부터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상호주의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연계해 북측에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봉 정례화 제의 배경에는 이산가족 문제는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그쳐서는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남북은 2000년 이후 지난해 추석을 계기로 열린 것까지 포함해 총 17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을 실시했다.

매회 대략 200명 수준에 그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생존 이산가족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70% 이상을 차지해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등록한 이산가족 수는 12만8129명이며 이 가운데 8월 말 현재 4만4444명이 이미 사망했다. 사망률이 34.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연평균 3000여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구나 생존자 가운데도 90세 이상 5.6%, 80~89세 35%, 70~79세 36.6% 등 70세 이상이 7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안을 북측이 전격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적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26~28일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의사 전달을 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북측은 이번 상봉 제의에서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수해지원 외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 등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상봉 등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 수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도끼를 계속 갈면 침이 된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다"며 북측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은 또 다른 인도주의 문제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측이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처럼 성사되는 이산가족상봉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입장 표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